

광주역 상인들의 분노

“KTX 진입 무산 언젠데, 아직도 존폐 논란...광주시·지역정치권 뒤흔었다”



호남고속철도가 끊긴 광주역 주변 상가에 손님의 발길이 크게 줄어들면서 상권이 붕괴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의견차를 이유로 광주역 존폐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역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손님을 떠나 사람 자체를 구경하기 힘들습니다”, “이제 와서 도시철도 2호선과 연계해 개발한다느니,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KTX라도 진입해야한다느니, 어이없는 말만 늘어놓고 있으니... 힘없는 서민만 죽어가는 거죠.”

7일 만난 광주역 인근 상인들은 푸념을 넘어 분노했다. 지난 2일 호남고속철도(KTX) 진입이 끊긴 지 꼭 6일만으로, 하루평균 5000명이 넘는 광주역 이용객이 1000명대로 내려앉았다.

이날 광주역에서 만난 한 상인은 “정부에서 수년 전부터 KTX(광주역)진입은 안 된다고 했는데, 그동안 광주시를 비롯한 지역구 국회의원 등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요즘 인근 시민들이 모였다 하면 공무원이고 정치인이고 눈앞에 나타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할 정도로 격앙돼 있는 상태”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광주시와 지역구 국회의원이 광주역의 활성화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등 엇박자를 내면서 인근 시민들의 속만 타들어 가고 있다.

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와 북구청, 북구 시의원, 구의원들은 광주역 폐쇄를 전제로 한 도심 재생 사업에 대부분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

반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새정치연합 강기정(광주 북구 갑) 의원은 그동안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市-강기정 의원 활성화 방식 엇박자

북구청·구의회 폐쇄후 재개발 가다

강의원측 뒤늦게 “市 결정 따를 것”

KTX의 광주역 진입을 ‘나 홀로’ 추진하는 등 사실상 광주역 폐쇄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 왔으며, 최근에는 광주역 폐쇄 여부는 광주시가 결정해야한다는 입장으로 일부 선화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는 광주역 폐쇄를 전제로 계획을 진행할 경우 강 의원의 마찰이 우려된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 대책 마련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광주역의 폐쇄 또는 존치 여부가 결정돼야만 공식 용역발주 등 후속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광주시가 진행중인 유일한 광주역 관련 용역도 ‘알맹이 없는’ 부실용역으로 드러났다.

시는 지난해 12월 사업비 3억원을 들여 5년마다 시행하는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 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광주역 KTX 진입 무산 등이 거론되자 추가 용역비 없이 ‘광주역세권 개발 기본 계획 제2호’를 끼워넣었다.

해당 용역의 핵심은 도시정비 구역 58개소의 사업 타당성 검토와 도시재생 방향 설정 등이 핵심으로, 광주역 용역 부분은 이른바 민원성 ‘기타’용역인 셈이다.

최근 광주 북구청이 발표한 ‘광주역 도시재생 활성화 대책 수립 용역 최종 결과물’도 용역비가 1000만원대에 불과해 깊이 있는 내용보다는 개발 의견을 수렴하는 수준이었다는 게 북구청의 설명이다.

예견됐던 광주역 역세권 붕괴로 시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지역구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느라 가장 기본 단계인 용역발주조차 미루고 있는 것이다. 당장 용역을 발주하더라도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점에서 광주역 활성화 계획 수립은 올해를 넘길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광주역 폐쇄 또는 존치는 광주시가 결정해야 하고, 동시에 도심활성화 대안과 재정투자 대책까지 내놓으면 우리도 따를 것”이라며 “다만 이러한 대책 마련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고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서대전역 경유선 등) KTX가 들어와야 한다는 노력을 해왔던 것인데 (시에서) 오해를 한듯하다. KTX가 들어오지 않는 광주역은 필요가 없으며, 시는 즉각 광주역 폐쇄를 포함한 도심활성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

국민 10명중 7명 “세월호 인양해야”

반대 보다 4배 많아...호남 84%로 압도적 찬성

국민 10명 중 약 7명은 세월호를 인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박근혜 대통령이 6일 ‘기술적으로 가능할 경우 세월호 인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해 긴급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인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65.8%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인양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16.0%)의 4배를 넘는 수치다. ‘잘 모르다’는 응답도 18.2%에 달해 반대 의견보다 더 많았다. 앞서 리얼미터가 지난 2일 실시한 조사 때에 비해 찬성(49.4%) 의견이 15%포인트가량 높아진 것이다. 세월호 인양에 대한 대통령의 ‘적극 검토’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리얼미터는 풀이했다.

모든 계층에서 ‘인양 찬성’ 의견이 대다수로 나타났다지만 지역·연령별로는 온도 차가 있었다.

광주·전라(찬성 84.1%·반대 9.3%)에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경기·인천(찬성 66.2%·반대 17.2%), 부산·경남·울산(찬성 64.9%·반대 18.0%), 서울(찬성 63.3%·반대 19.6%)에서도 찬성 의견이 높았다.

찬성 비중이 가장 낮은 대구·경북(찬성 58.1%·반대 22.1%)과 대전·충청·세종(찬성 50.9%·반대 9.0%)에서도 과반이 인양에 찬성했다. 연령별로는 40대와 20대에서 찬성 의견이 78.3%(반대는 40대 9.4%·20대 11.5%)로 가장 높았다. 이어 30대는 찬성이 65.9%(반대 10.5%), 60대 이상은 54.2%(반대 21.6%), 50대는 53.3%(반대 26.

‘세월호 인양’ 여론조사 결과

4월 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 대상 휴대전화(50%), 유선전화(5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 (응답률은 5.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단위 : %



자료/리얼미터

연말뉴스

7%) 순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48.9%, 반대가 25.5%였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82.3%, 반대가 12.1%로 나타났다. 새정연 지지층에서 찬성 비율이 더 높았지만, 어느 정당을 지지하든 찬성 의견이 반대 측보다 많았다. 무당파에서도 찬성이 69.9%, 반대가 10.7%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6일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상대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각 5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포인트다. <연합뉴스

유기준 “세월호법 시행령 철회 불가...수정은 가능”

“인양 기술검토 80% 정도 진행”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세월호 유족과 야당을 중심으로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입법 예고한 전체 안을 철회할 수는 없다”며 “현재 (유족 등에서) 제시한 안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수용하고, 안 되는 것은 적극 검토해서 일부 문항은 수정함으로써 계획에 맞춰 특별조사위원을 출범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현재는 인양을 하게 되는 경우 기류 유출 가능성이나, 선체를 들어 올릴 때 선체 절단이나 파공 위험성 등 세부적인 기술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현재 세월호 인양에 대한 기술 검토는 대략 80% 진행됐으며 4월말까지 보고

서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세월호 인양과 배·보상 등 수습에 드는 비용을 묻는 질문에는 “선체 인양을 전제로 대략 55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본다”면서 “(유병연 일가 등을 대상으로 한) 구상권으로 회복할 금액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장관은 “보전 처분한 유병연 일가의 재산, 선사 재산이 1281억원이지만 실제 회수될지는 두고 봐야 하며, 일부는 보험에 의해 처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여론조사를 통해 인양을 결정하려 한다고 나온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공론화에 여러 방식이 있는데 여론조사가 합리적이고 다른 방법도 병행할 수 있다고 한 것이지 여론조사를 한다고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해수부 세월호 피해 배·보상금 신청 진도군청서 현장 접수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고로 피해가 난 진도와 인근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이달 20일부터 6월19일까지 두 달 동안 진도군청에 배·보상금 신청을 위한 현장 접수처를 운영한다.

이에 앞서 8일에는 진도군 조도면 북치회관에서 세월호 침몰 해역 주변 섬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유류오염 손해배상과 어업인 손실보장에 대

해 알리고, 9일에는 진도군청에서 같은 내용의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유류오염에 대해서는 재산적 피해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분을 합한 금액이 지급된다. 어업인은 세월호 사고에 따른 어업손실 등 재산적 피해와 수입 손실을 보상받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의뢰 제140611-중-59153호

밝은광주안과

축 건물 천층 안과병원운영

6/7F 라식센터

4/5F 수술센터

2/3F 외래진료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대상
-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
-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
- '레인드롭' 노안시력 교정술 시행

백내장 4無 수술
無통증·無출혈·無봉합·無입원 수술가능
백내장+노안+난시를 단한번의 수술로 해결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의료광고심의의뢰 제150204-중-68156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